

보도일시 2026. 4. 2.(목) 11:00
4. 3.(금) 조간

배포 2026. 4. 2.(목) 09:00

2026년산 사과 안정 생산계획 발표 및 사과 안정생산 추진단 회의 개최

- 사과 생산량 전년대비 10% 확대로 수급 안정 도모
- 주산지별 생산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적정 착과량 확보 및 생육 관리 강화, 계약재재 확대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사과 생산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26년산 사과 안정생산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과 안정생산 추진단」 회의*를 4월 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026.4.3. 16:00~17:30 / 세종시

(참석자) 식량정책실장(주재), 충북·전북·경북·경남도 농정국장,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원예특작과학원 과수기초기반과장, 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장, 농협, 사과연합회 등

최근 사과 산업은 재배면적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화기 냉해 등 이상기상의 영향으로 생산량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생산량은 최대 566천톤에서 최소 394천톤까지 큰 폭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

* 사과 생산량(천톤) : ('21) 516천톤 → ('22) 566 → ('23) 394 → ('24) 460 → ('25) 448

업계에서는 이러한 공급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장바구니 물가 부담 및 중장기적으로 사과 소비 위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2026년산 사과의 생산 확대를 통한 수급 안정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2026년산 사과 생산 목표를 전년(448천톤) 대비 10% 이상 높은 493천톤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❶ 적정 착과량 확보, ❷ 연중 생육관리 강화, ❸ 수급관리 체계 개선, ❹ 중소과 소비 확대, ❺ 추진체계 구축(「사과 안정생산 추진단」) 등 5개 과제를 수립하였으며,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정 착과량 확보를 통한 단년도 생산량 확대

사과는 개화량 대비 6~8% 수준의 최종 착과량(열매가 달리는 양)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적화·적과(착과에 사용하지 않는 꽃이나 열매를 솎는 것)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올해 농식품부는 농가 지도 등을 통해 2026년산에 대해서는 해당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다만, 과다 결실(열매가 열리는 것)에 따른 해거리(격년으로 열매가 많이 맺히고 줄어드는 현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과원 면적 중 절반에 대해서는 착과량을 10% 수준으로 높이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기존 착과량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거리 발생 가능성이 낮은 저장품종인 후지 사과를 중심으로 착과량을 확대하고, 수세(나무자람새) 관리, 엽과비(1개 과일 당 나뭇잎 비율) 확보, 영양관리 등 생육 전반에 대한 기술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생산량 증대를 위해 각 사과 주산지(경북도, 경상도, 충북도, 전북도)별로 자체 생산량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 농촌진흥청, 농협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지원반을 구성하고, 농가 대상 밀착형 기술지도와 함께 비대촉진제 할인 공급, 적과 약제 및 농자재 지원, 저품위 과실 가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연중 생육관리 및 재해 대응 강화

두 번째로, 개화기 냉해, 여름철 폭염·병해충 등 사과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 관리를 실시한다.

합동 현장지원반을 중심으로 개화기 냉해 예방 집중관리, 병해충(탄저병, 역병, 응애 등) 사전 방제 등을 위한 연중 상시 생육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냉해·태풍·폭염 등 3대 재해 예방시설을 조기 보급하고, 약제·영양제 공급을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현장지원을 통해 기술지도 및 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3. 계약재배 및 지정출하 확대 등을 통한 수급관리 개선

생산 확대와 더불어, 연중 사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의 계약재배 및 지정출하 물량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계약재배 물량은 2025년산 38천톤에서 2026년산 43천톤(계획)으로 확대하고, 계약재배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재해대응, 생육관리 등 목적의 약제·농자재 등을 확대 공급한다. 또한 수확기 수급상황에 따라 지정출하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과 공급의 단절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사과 수급정책의 도매가격 지표로 활용되는 기존 ‘가락시장 상품(上品) 가격’은 산지 직거래 비중 증가 등에 따라 물량이 줄어들어 단기 변동성이 심화된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변동성 증가로 합리적인 시장 기준 가격 제시 역할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도매가격 기준을 가락시장 중위가격 또는 평균가격 기준으로 개편하여 수급정책의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4. 중소과 중심 소비 기반 확대

과거 명절용, 대과 위주의 사과 소비 경향이 최근 들어 중소과 중심의 일상 소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중소과 유통 공급 및 유통 효율화를 위해 지역별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와 과실 공동브랜드(썬플러스)를 통해 중소과 매입 및 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동브랜드에 납품하는 APC별로 중소과 출하실적 연계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계약재배·지정출하 물량 중 중소과를 의무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5. 「사과 안정생산 추진단」 운영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주산지 지방정부(충북도, 전북도, 경북도, 경남도), 농촌진흥청, 농협 등이 참여하는 「사과 안정생산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4월 3일 「사과 안정생산 추진단」 첫 회의를 통해 각 기관별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한다. 농식품부는 금번 회의를 시작으로 1~2주 단위로 사과 생육 및 대책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도 지방정부 책임 하에 시·군 단위의 현장지원반을 운영하여, 중앙-지방-현장을 연계한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개화기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26년산 사과의 안정생산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생산기반 안정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신규 산지를 중심으로 생산성 증대, 노동력 절감을 위해 기계화·무인화·재해예방 체계를 갖춘 과수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3대 재해 예방시설을 집중 보급하여 2030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의 30% 수준까지 설치를 지원하고, 병해충 대응력이 높은 무병묘 공급을 확대하는 등 우량자재의 공급 또한 늘릴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현장의 농민들께서도 사과 생산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과 수급을 안정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사과를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책임자	과 장	조민경 (044-201-2251)
		담당자	사무관	이창형 (044-201-2252)